
기억과 증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민주노조운동 양규현

1970~80년대의 농민운동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이창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민주노조운동

양규현*

노동자역사 한네 대표

1. 들어가며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였던 민주노총이 출범한지 16년이 되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긴장이 자본주의 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금융세계화의 물결은 노동자계급에게 무차별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자본주의 체제가 파생시키는 다양한 문제와 질곡에 대한 구조적 책임이 자본가계급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비정상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정리해고로 나타났다. 노동자

* 양규현은 전노협 위원장과 민주노총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들은 생계의 절박함, 가정파탄, 우울증 등 심각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조운동은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기 위한 방안은 고사하고, 민주노조의 정신과 노선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위기는 깊어가고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이후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제를 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산업별노조(이하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계급적 산별’의 질을 확보하려는 투쟁보다 형식적 재편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과 계급성 그리고 변혁지향’에 대한 희망들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불안정노동으로 노동자계급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내 몰리고 있어도, 그 흔했던 계급연대의 함성은 들려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술한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노출되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대응은 고작 성명서 조각으로 나풀거린다. 조직력과 대중적 결의가 부재할 때 결행했던 ‘선도투(先導鬪)’는 기획조차 되지 않는다. 각종 집회들에서 힘 있게 펼쳐이던 ‘노동해방’ 깃발도 내려진 지 오래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분노는 있으나 조직되지 않는 무기력이 압도한다. 우리는 이를 ‘위기’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돌이켜 보려는 것은 특정 시기에 분출되었던 운동들을 단순히 조망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현장 노동자이자, 민주노조운동에 몸담았

1) 2007년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타협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와중에 조합원 및 가족의 14번째 죽음이 발생했다.

던 사람으로서 사회 전반에 누적되고 있는 모순에 대한 저항과 폭발을 운동사적 관점으로 서술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격동의 시기에 전개되었던 사업·활동·투쟁의 흔적들이 역사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적되어 변화·발전된다는 확신에 토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20년 전에 창립하여 6년간 흔적을 남겼던 전노협의 궤적과 기억을 정리하고자 한다.

2. 1970년대의 노동자 통제와 노동운동

1) 노동자 통제

(1) 노동자 조직에 의한 노동자 통제: 한국노총

1970년 11월 13일에 일어난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 노동자들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실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은 개발주의·국가주의·반공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었고,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당했다.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OECD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대였던 것에 비해, 한국 노동자들은 주 55시간을 일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²⁾ 실제 노동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간 노동시간이 100시간을

2) 1986년 『ILO통계연감』.

홀쩍 넘은 노동자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전체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요구 보다는 전체 국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했다. 따라서 노동자는 전체 국민을 위해 고통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노선이 관철되는 환경에서 노동조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했다. 정부와 언론은 노동자의 삶의 개선 요구를 반국가적 이데올로기이며, 국민의 불안정한 생활을 초래하고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방했다. 이를 추종했던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노총은 정치적으로는 ‘3선개헌’을 지지했고, 유신을 찬양했다. 경제적으로는 정의사회구현,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국민화합과 국력배양이 최선이라고 했다. 다만 겉으로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의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으며, 이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노조 운운하며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한국노총의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당시 한국노총이 어떠한 운동방침과 행태로 활동했는가는 1973년의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에서 잘 드러난다.

1973년 한국노총의 운동방침³⁾

“우리는 국가이익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적인 극렬한 운동방향을 배제하고 건전한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증진시켜 나가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임금인상 일변도의 활동노선을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운동을 통한 분배원천의 증대라는 노사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보다

3) 1973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중 사업보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다.”

(2) 공장새마을운동

농촌새마을운동으로 성과를 획득한 박정희는 1973년 11월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공장새마을운동에 대해 연설했다. 박정희는 공장새마을운동이란 “낭비를 줄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하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주는 피고용인들을 가족처럼, 근로자는 공장 일을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장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것이었고, 동시에 산업부흥운동이었다. 그것은 ‘종업원을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 혹은 사원을 가족처럼, 회사를 내 집처럼’이라는 모토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노동자를 자식으로 취급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또 다른 부모가 되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간부들을 1주일 동안 연수원에 모아놓고, 새마을운동본부의 유능한 강사진들로부터 병영식 교육을 받게 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공단본부에 위치했던 새마을 연수원에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1주일씩 연수가 이루어졌다. 연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마치 군대의 훈련소와 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구보를 하면서 일과를 시작했고, 밤 10시까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공장새마을운동 교육은 곧 현장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공장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 내용은 유신의 우월성, 애사심 배양,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활동을 위한 분임토의 기법의 습득 등이었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수출주도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납기일 내에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잦은

산업과 반복되는 철야근무로 불량품이 양산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가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시키며,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를 새마을운동을 통해 유포시켰던 것이다.

2) 노동운동

(1) 민주노조투쟁

박정희 정권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산업 역군으로서의 의무만 부여하고, 사회적 주체로의 위치는 꿈도 못 꾸게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관점으로 사회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동운동을 다루었다. 기본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자율적 타협’이 아니라, 억압적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경공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 한국노총과 산별노조는 어용화되었고, 대부분의 단위노조는 힘을 상실한 상태였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자주성’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며 투쟁했다. 1970년대 전반기에 전개된 민주노조 활동은 청계피복 노조결성투쟁(1970/11), KAL빌딩 방화투쟁(1971/09), 동일방직의 노조민주화투쟁(1972/07), 콘트롤데이타의 노조결성투쟁(1975/05) 등이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는 협신공업피혁사 민중진의 가스 질사사건(1977/07), 방림방직 임금체불사건(1978/08), 해태제과사건(1978/08), 동일방직사건(1978/03), YH사건(1979/09) 등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주로 경인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종교계의 지원 속에서 새로운 노조운동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보다는 단결을 통한 현실극복이라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들인 동일방직 민주

노조 사수투쟁과 YH노동자 투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동일방직노조지부 조합원은 1,380명이었다. 이 가운데 1,200명이 여성조합원이었으나, 노조지부장은 회사에 순종적인 남자들이 맡았다. 이런 상태에서 그 해 7월에 민주노조를 주장한 주길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지부장에 선출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 후 동일방직 노조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전환되어갔다. 회사는 집행부와 열성 조합원들에게 협박, 회유, 폭행, 사표강요, 부서이동 등을 함으로써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혈안이었다. 회사는 1976년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매수해 회사 측이 내 세운 고두영을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농성에 돌입했고, 7월 25일에 수백 명의 경찰이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여성조합원들은 “옷을 벗자, 벗고 있는 여자 몸에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외침에 따라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나체시위’를 벌였다.

1978년 2월 21일 새벽에는 회사에 매수된 남자 행동대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사무실로 오는 여성조합원들에게 똥물을 뿌렸다. 가죽장갑을 끼고 똥물을 가슴과 입에까지 쳐 넣었으며, 똥바가지를 뒤집어씌우는 야만적 행위를 저질렀다. 조합원들은 “배우지 못해 아는 것은 없지만 똥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싸웠다. 유신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중앙에서 직접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에 개입하고 있었다. 동일방직은 1978년 4월 1일자로 124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그러자 전국섬유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방직을 ‘사고지부’로 규정하고 집행부를 해산시켰다. 섬유노조는 해고자 124명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전국의 사업장에 보냈다. 이로써 해고자들은 일 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말았다.

YH무역회사는 1966년 자본금 100만 원과 종업원 10명으로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에는 4천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내 최대의 가발업체로 급성장했다. 1975년 5월 24일에 YH물산의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최순영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YH물산에서 돈을 번 장용호 회장은 미국으로 돈을 유출시켜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그곳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1970년대 말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자, 1979년 3월 30일에 폐업 공고를 냈다. 노동자들은 4월 13일에 기숙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오랜 농성에도 효과가 없자, 200여 명의 노동자는 8월 9일에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8월 11일 새벽에 경찰이 투입되어 강제해산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 21살이었던 김경숙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YH노동자들을 야당 당사에 끌어들었다는 것을 빌미로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김영삼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그의 지지기반인 부산과 마산에서 공분을 샀고, 10월 16일에 발생한 부마항쟁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편 부마항쟁에 대한 진압이 늦어진다고 책임추궁을 당하며 코너에 몰렸던 김재규는 10·26사건을 일으켰다. 돌이켜보면, YH노동자들의 투쟁이 박정희 유신체제를 마감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새싹을 띄운 민주노조운동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면 아래서 활동하던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한국노총의 이름을 빌려 수련회를 개최하곤 했다. 이들은 매년 11월에 '전태일 추모제'를 개최하기 위해 산 속으로 숨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추모제를 통해 전태일의 정신을 공유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열망을 다졌다. 노동자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찾은 곳은 북한강 강변이었다. 노동자들은 이곳에 짐을 놓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에게는 짐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배를 이용해 셋강을 건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추모제를 열었다(유경순 2007, 233-264). 노동자들은 11월의 차디찬 밤공기 속에서 긴장과 추위를 각자 들고 있던 촛불로 녹이며, 열

사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보통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활동가들 50여 명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1970~80년대를 경과하며 민주노조운동이 군부독재와 한국노총으로부터 고립된 처절한 싸움을 할 때, 유일하게 민주노조활동을 지원해준 것은 교회였다. 노동운동단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연구소 하나 없는 상태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교회의 기여와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교육활동에 의한 민주성 확립과 취미서클을 활용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기여했지만, 한국노총에 대응하는 조직의 미래상과 전망의 제시에는 한계를 보였다. 교회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정신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용노조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이광일 2008, 128).

3. 신군부의 집권과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노동운동

1) 노동자 통제

1980년대에 들어 신군부의 정화 조치로 인해 노동계는 기업별노조로 강제 재편되었다. 이후 한국노총은 한층 더 어용화되어 갔다. 한국노총은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를 지지하는 등 정권에 대한 충성과 협력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 한국노총 대표였던 정한주는 협력의 대가로 ‘국보위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한국노총은 독재권력 앞에서 충성서약을 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정치적 진출에 혈안이 되었다. 한국노총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애당초 기대할 수도 없었다.

한국노총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기보다는 불순세력 운운하며 전두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다. 한국노총 내의 민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별연맹에 1,000여 명의 행동부대를 조직하여 각목으로 응징하겠다”는 협박까지 해대면서 노동자들의 활동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동아일보 1987/08/28).

한국노총은 산하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하면서도 생존권투쟁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반해 친 회사적인 노조에게는 아주 쉽게 노동조합 ‘인준증’을 발급했다.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적인 행동을 일삼아 조합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은 자주성과 민주성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의 성격을 벗어난 관료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대투쟁 이후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군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정화 조치는 물론이고, 삼청교 육대(80여 명)에 민주노조운동을 갈망한 노동자들을 강제 입소시키는 등 무차별 탄압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조사’를 통해 압박했다. 정부는 업무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예산 전반을 관리·통제했는데, 그 비열함이 극에 달했다.⁴⁾

업무조사가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당국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공금횡령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 영수증 철에 간이세금계산서 수십 개를 선별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서점과 문방구 등을 찾아가 “이 세금계산서 발행 원본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집행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당시에 계산서 원본을 보유한 업체는 극히 적었다.

4) 노동부는 노조예산 편성의 기준을 내려 보냈다. 지침은 관·항·목에 대한 편성비율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쟁의비 등은 예산 편성기준 원칙에 어긋나면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복지비 항목은 장려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마친 근로감독관은 노조사무실로 들어와서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이라며, 게시판에 ‘조합원 여러분께’라는 노동조합 업무 감사결과를 게재했다. 게시된 내용은 “상기 노동조합은 회계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집행을 감사한 결과 공금횡령을 확인하고 변상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는 것이었다. 업무조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결국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노동조합 예산집행 감사는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해 1990년대에 다시 등장했다.

2) 5·18민중항쟁 전후의 노동운동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했다. 재야와 학생운동 진영은 권력의 변동기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서울의 봄’을 열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분출되었고,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억압적 노동운동에 짓눌렸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2천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사북항쟁과 수도권 중화학공업 사업장들의 시위가 가두투쟁 양상으로 과격해지는 것을 본 후, 이를 완화시키고자 결의대회를 소집했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13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전국노동자 임금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섬유노조와 금속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민주노조 진영 3,000여 명이 반 노동자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노총을 규탄하며 점거투쟁을 벌였다. 한국노총 정한주 직무대행이 대회를 시작하려는 순간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그를 끌어내리고 연단을 점거한 후 투쟁을 시작했다. 점거 투쟁은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원풍모방조합원, 섬유산업 민주노조 활동가 그리고 금속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강당과 통로의 벽에 한국노총을 규탄

하는 대자보와 ‘동일방직 똥물사건’ 사진들을 붙였고, 유신정권과 결탁했던 한국노총을 규탄했다. 농성 개시 다음날에는 서울대 학생 3백여 명이 연대투쟁을 위해 스크럼을 짜고 올라왔으나, 점거농성 지도부의 거부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최초의 노학연대가 불발되었다. 1970년대에 탄압을 받았던 섬유, 금속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계엄당국의 조짐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노동자들과 계엄당국이 농성대오를 위협함에 따라, 한국노총의 점거농성은 자진해산하고 말았다(유경순 2007, 233-264).

5·17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일 때, 광주에서는 학생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었다. 민주화 시위에 대한 계엄군의 살인 진압은 민중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무장한 시민군들은 계엄군을 광주외곽으로 몰아낸 뒤 며칠 동안 ‘해방광주’를 만들었다. 대중조직(노동조합)은 역사적인 5·18민중항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전남도청을 끝까지 죽음으로 사수한 윤상원이 노동자 정치조직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 5·18민중항쟁에 대한 평가의 단면으로 제기되었을 뿐이다.

5·18민중항쟁은 근현대사 민중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항쟁이었다. 또한 5공화국을 민중학살로 등장한 집단으로 규정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낙인을 찍었던 사건이었다. 아울러 변혁운동의 주체가 노동자·민중이고, 투쟁의 대상이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또한 진압군의 투입을 승인하고 전두환 정권을 인정한 미국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이 집결하고 확대되면서 마침내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가두는 민중의 파도가 형성되었다.

5·18민중항쟁 이후 계엄정국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지하활동으로 전환했고, 학습모임과 같은 소모임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학생운동 출신가의 현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신군부 등장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민주노조를 지향하던 활동가들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외신에서 짜깁기한 광주학살의 비디오를 보기 위해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자취방을 물색했다. 이들은 담요로 방문을 가리고, 광주학살의 끔찍한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신군부에 대한 분노를 공유했다.

3) 유화국면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신군부의 탄압(정화 조치, 업무조사, 노동법 개악)으로 숨을 죽이던 노동자들은 1983년부터 시작된 유화국면을 틈타 생존과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다. 1984년 5월에는 택시 노동자들이, 1985년에는 대우자동차 투쟁과 구로동맹파업이 포문을 열었다.

대우자동차 투쟁은 임금인상이 쟁점이었으나, 많은 의미를 내포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투쟁이라는 파급력이 정세에 영향을 끼쳤으며,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다양한 대중매체를 만들어냈다. 이는 경제적 실익과 노조민주화투쟁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내지 못한 한계’와 ‘민중운동과 노동운동단체의 연대를 거부한 오류’ 그리고 ‘목적의식적인 정치적 선전·선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생운동 출신과 선진 노동자들이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노정되었는바, 그 이유는 이들의 의지와 결의 수준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운동조직이 없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구로동맹파업은 민주노조 탄압에 대응한 파업이었다. 당국은 1985년 3월 임금인상투쟁 이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대우어페럴 노조 지도부를 구속했다. 이에 인근의 민주노조들은 “대우어페럴 탄압은 타 사업장의 탄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김현옥 2007).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탄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리하여 효성물산, 선일섬유, 가리봉전자, 대우어페럴, 부흥사 노동조합이 동맹파업에 참가했으며, 청계피복,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노동조합이 지원농성을 했다. 구로동맹파업은 소그룹운동을 통해 ‘계급’으로서의 실체를 확인했고, 전술에 있어서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치조직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도출했으며, 노동운동의 정치의식 나아가 정치투쟁을 고양시키기 위한 적극적 방안모색 또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서울노동운동연합 1985, 189-190).

그 결과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의 출범에 이어 인천지역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들은 대중정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향했다. 따라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진정한 민주사회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주의를 거부하며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결성을 모색했다. 서노련과 인노련의 조직노선은 ‘한국노동자 복지협의회’의 운동방침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로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실천적 검증을 구로연대파업의 평가에서 돌출했으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즉 서노련은 구로동맹파업을 참여한 정치투쟁으로 인식했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정치투쟁, ‘지식인 출신 활동가들의 올바른 지도가 핵심적 역할을 한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구로동맹파업으로부터 ‘정치투쟁의 전형’을 도출했는데, 이는 과도한 자기 욕심일 것이다.

6월 24일부터 28일의 구로동맹파업은 구속자 43명, 불구속입건 37명, 구류 47명을 양산했다. 또한 해고, 강제사직, 출근정지, 휴폐업 등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가 1,300여 명에 이르렀다(서울노동운동연합 1985, 324). 구로동맹파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들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동맹파업이었다. 정권의 탄압에 대해 자기 조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비타협적 연대투쟁을 했다.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 정권의 폭력성과 반 노동자성을

폭로했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동맹파업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동운동이 부문운동으로서가 아닌 변혁운동의 중심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연대투쟁위원회’라는 투쟁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 이로 인해 해고자와 구속자 등 엄청나게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4. 7~9월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 결성

1) 7~9월 노동자 대투쟁

6월항쟁에 이어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에는 약 122만 명이 참가했으며, 3,458건에 달하는 노동쟁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30건이, 가장 정점에 도달했던 8월에는 하루 평균 83건의 쟁의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1988년 상반기까지 2,333개의 신규 노조가 만들어졌다. 당시에 결성된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연대투쟁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고, 민주노조운동의 중앙 조직인 전노협 건설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는 5·18민중항쟁 이후 공장으로 들어간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현장운동과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기반은 더욱 강고해졌고, 조직 발전의 전망과 운동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도 큰 힘이 되었다.

1987년 7월 5일 울산의 현대그룹 소속의 현대엔진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노동자 대투쟁은 시작되었다. 이 불길은 부산, 창원, 마산, 거제도, 구미, 대구, 포항과 중부지역, 인천, 부평, 부천, 서울, 안양, 군포, 성남 등 전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대공장에서 시작된 투쟁은 택시, 버스 등 운수노동자 그리고 강원도의 광산, 부두, 선원 등

모든 생산직으로 파급됐다. 이어서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전문기술직 노동자도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중소기업에도 확산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계급 형성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적 파업투쟁이었다. 광범한 노동자를 단련시키고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조직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연대투쟁과 공장 의 가두투쟁방식은 1970년대 단위사업장 중심성을 극복하고, 연대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계급성, 변혁지향성이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었다. 노동자가 민주화 세력과 민주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법을 무시한 ‘선 파업, 후 노동조합 결성’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노동자 대투쟁은 사업장 내의 경제적 요구를 전 계급적·제도적 요구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조직적 지도성이 취약해 강고한 투쟁역량으로 광범한 대중조직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대투쟁이나 통일적 투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연대투쟁의 위력이 가장 잘 확인되었던 것은 1988년의 전국노동자대회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들은 일상 활동을 강화하고 연대투쟁을 통해 노조탄압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3,500명의 경찰을 투입해 철도기관사 파업과 농성을 진압하고, 9개 지역에서 1,349명을 연행하여 1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 이어서 현대엔진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17명이 구속되었다(전태일기념사업회 1988, 21).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88년 임금인상투쟁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투쟁 방식들이 선보였다. 준법투쟁의 성격으로 집단월차휴가, 집단

조퇴, 점심시간 지연시키기, 집단으로 부모에게 효도전화 걸기, 부서장 면담하기, 조합원 총회 계속하기 등이 그것들이었다. 이러한 투쟁 방식들은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의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본격화 되면서 연대투쟁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연대투쟁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깊어졌다. 창원지역에서는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가 창립되었다. 지노협은 연대의 성과를 모아 ‘투쟁을 통해 건설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1988년 11월 12일 밤, 연세대에는 노동자 대오와 함성으로 가득했다. 학교는 온통 노동자의 깃발이었고, 전야제가 개최된 노천극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갖는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대회는 노동운동의 전망 그 자체였다. 다음날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악법철폐를 주창하면서 수 백 명의 전국 노동자 대표자들이 손가락을 찢어 대형 광목에 ‘노동해방’이라는 혈서를 쓸 때는 침묵과 긴장의 도가니였다. 노동자들은 피로 쓴 ‘노동해방’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여의도까지 장관을 이룬 행진을 했다. 경찰이 행진 대열을 차단했으나,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전진을 막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노동해방, 악법철폐, 해체 전경련, 타도 민정당, 악법철폐, 민주쟁취,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끝장내자, 부정축제 환수하여 서민주택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랜 기간 억눌렸던 해방을 향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서울 하늘에 메아리쳤다.

2) 전노협의 출범과 노동운동의 고양

(1) 전노협의 출범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말에 지노협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 노동법개정투쟁을 거치면서 응집력이 더욱 높아졌다. 1988년 12월에는 일부 업종협의회를 포함하여 ‘지역·업종별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를 만들어 냈으므로, 전국조직 결성의 첫발을 내딛었다. 느슨하지만 한국노총과 분리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구체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회의는 투쟁과제로 임금투쟁과 노동법개정 투쟁 그리고 민중연대를 결의했다. 그리고 조직적 과제로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과 계급적 산별건설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노협준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노협준비소위원회는 치열한 논쟁을 걸쳐 발족했다. 논쟁의 주요 쟁점은 민주노조 조직발전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한국노총민주화론’과 ‘새로운 조직건설론’이 대립했다. 한국노총민주화론의 주장자들은 한국노총의 조합원이 180만 명인 반면, 민주노조 역량은 20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시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조직 주체를 건설하는 것보다 각 지노협을 해체하여 한국노총과 통합하고, 그 속에서 민주파 블록을 형성하여 중간노조를 견인함으로써 한국노총을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조직 건설의 주장자들은 한국노총을 민주화시키기에는 역사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너무 밀착되었다는 점에서 논지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자주성, 민주성 결여와 관료적 조직운영이 고착화된 한국노총은 정상적 노동조합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다 근거와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조성된 정세를 운동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헌법에 명기된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정부의 구미에 맞추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제3

자 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조항의 존속을 한국노총이 청원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행태는 명백했다. 그리하여 절대다수의 입장들이 ‘새로운 조직건설론’으로 수렴되었고, 지노협은 전국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결의를 모으게 되었다.

전국회의는 1989년 12월 11일에 해산했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1월 22일에 전노협이 출범했다. 전노협 출범식은 서울대로 예정되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를 했다. 이에 전국의 400여 명의 대원들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 집결했고, 이곳에서 전노협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경찰은 수배 중이던 단병호 전노협 초대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던 무렵에 성균관대로 진입했다. 행사장을 방어하던 선봉대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전노협 지도부는 결성대회를 마치고, 무사히 탈출했다.⁵⁾

전노협에는 전국 14개 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2개 업종별노조협의회(민주출판, 시설관리)가 가입했다. 전노협은 총 602개 노조들과 19만 3천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이었다. 전노협은 13개 업종별 노동조합 전부를 포괄하지 못한 채 출범했으나, 민주노조운동의 확고한 구심과 추진력이 되었다. 전노협은 스스로의 위상을 “전국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이며,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 조직’이라는 소임을 천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전노협에 대해 물리적·제도적 억압은 말한 것도 없고, 3저 호황의 소멸을 근거로 하여 ‘경제위기설’, ‘무노동 무임금’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다. 때문에 전노협은 출범과 함께 존폐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면서 ‘사수 전노협’을 결의했다. 전

5) 전노협 출범식이 개최된 날은 보수대연합이 선언된 날이기도 했다. 이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 3당 합당을 선언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전노협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

노협 결성으로 시작된 ‘비타협 투쟁정신’은 하나의 기류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산별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조직들⁶⁾과 노동조합의 유기적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계급적 질을 확보해갔다. 그렇지만 전노협 건설과 사수 투쟁의 과정에서 전노협은 전조직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2) 자생적 투쟁에서 조직적 투쟁으로

전노협 출범이 임박한 무렵인 1990년 1월 19일에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전노협 와해 대책’을 협의하고 의결했다. 그 내용은 첫째, 전노협의 단위노조 지원에 대한 제3자 개입 처벌, 둘째, 전노협 건설 추진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과 수배 등 사법처리, 셋째, 전노협 가입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실시, 넷째, 전노협 관련 행사의 원천봉쇄, 유인물 배포 사전차단 등이었다. 이러한 노태우 정권의 전노협 와해 공작으로 인해 1990년에 29개 노조가 전노협을 탈퇴했고, 700명이 넘는 간부가 구속, 수배, 고소, 고발되는 등 엄청난 탄압을 받아 조직력과 지도력의 손실을 가져왔다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점점 더 고양되었다. 1990년 4월 12일에 KBS노조는 서기원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다른 방송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방송민주화 투쟁’은 점차 확대되었다. 온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시켰고,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의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1990년 4월 25일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여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했다.

6)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주의민주통일전국연합 등을 말한다.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서노협)’ 등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을 결의한다. 경찰은 연대투쟁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육해공 3면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현대중공업의 노조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4월 28일에 총 73개 중대 12,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박격포’와 화염병, 볼트, 너트 등으로 대항했으나, 1시간 만에 회사 밖으로 밀려났다. 회사 내에는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한 지도부와 결사대 78명만이 남았다. 곧 이어 경찰은 KBS 농성장을 침탈하여 조합원 330명을 연행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정부의 노조 탄압이 극대화되자, 전노협은 곧바로 지역대표자들을 소집하여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전노협은 전국 동시파업을 결의했다. 이어서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일시에 파업에 들어갔다. 5월 1일의 노동절을 기해 전국의 70여 개 사업장 12만 명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이것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미군정에 대항하여 1946년 9월과 1947년 2월에 주도했던 전국적 정치 총파업 이후 43년만의 전국 동시파업이었다. 이와 같이 전노협은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운동 탄압에 전국 동시파업으로 맞서면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민주노조들의 전국중앙조직이라는 위상과 지도력을 확보해 나갔다.

그렇지만 전노협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가일층 높아졌다. 전노협은 출범 5개월 만에 위원장을 비롯하여 200여 명의 노조 간부 및 노동자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노동자가 고소·고발되었고, 경찰은 전노협 소속의 사업장을 18회 난입했다. 경찰은 전노협 중앙위원회의장에도 난입하여 전원을 연행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탄압으로, 전노협은 출범 1년여 만에 가입 노조수가 48%로 감소했고, 조합원 수도 45%로 축소되었다.

(3) 전노협과 대공장의 민주화 투쟁

1990년 11월 11일에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전태일 열사 20주기 추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행사에는 대기업 노동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 지역과 업종,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넘어서는 민주노조 총 단결의 기운이 높아갔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민주화 흐름은 시대적 대세로 확실하게 정착되어갔다. 1990년 후반 대공장 노동자들은 민주파의 투쟁성과 조직력을 지지했고, 그 결과 대기업에서 민주파 후보가 노조위원장에 대거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대우조선, 포항제철, 만도기계, 대림통상, 아세아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에 민주집행부가 들어섰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바탕이 되어 ‘대기업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노협은 연대회의와 더불어 ‘전국임금인상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1990년 12월 7일 대기업노조 대표들은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연대회의를 구성했는데, 우선하는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한다. 그런데 1991년 2월 8일부터 연대회의 소속 사업장인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개시되었다. 연대회의 상임의장 사업장인 대우조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은 투쟁 지원을 논의했다. 그러자 정부는 대우조선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한진중공업 등 연대회의 소속 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의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⁷⁾ 박창수는 1990년 위원장 선거에서 9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전노협 와해 공작에 실패한 이후, 유일하게 전노협에 가입한 대기업 노조인 한진중공업 노조를 타깃으로 삼았다. 1991년 2월 13일에 박창수는 대우조

7) 박창수 열사 사망은 21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선 파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전노협 및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간부 6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정부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한진중공업 노조의 전노협 탈퇴를 강제했다.

4월 25일에 부산의 한 카페에서 안기부 조정관이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들을 두 차례 만났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노조가 전노협을 탈퇴하면 박창수를 석방할 것임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던 5월 4일에 이마가 6cm 가량 찢어진 박창수가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5월 5일에는 안기부 직원이 입원실로 세 차례 전화화를 걸어오는 등 부산하게 무슨 일인가가 진행되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마당 시멘트 바닥에 놓여 있는 박창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국은 영안실 벽을 부수고 들어와 강제 부검을 실시했고, 가족들에게 부검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다. 검찰은 박창수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족들과 그의 동료들은 이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자살의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6층에서 투신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자살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발한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인 노조 사무국장은 자취를 감추었고, 가족들은 며칠 동안 병실에 구금되어 있었다.

(4) 전노협의 연대투쟁과 정부의 탄압

1991년 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가입했다. 이에 전노협, 업종회의 등 노동단체들은 10월 9일에 노동법 개정을 위한 ILO 기본권 조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LO공대위)’를 결성했다. ILO공대위는 정권과 자본의 신 임금 억제정책인 ‘총액임금제’에 맞서 전국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420여개 노조가 모여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정권과 자본의 제도적·정책적 노동운동 탄압에 맞섰다. ILO공대위는 11월 11일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힘을 결집한다.

ILO공대위는 전국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투쟁 결의를 모으기 위해 ILO가 포괄하지 못한 노동조합들까지 참여시켰고, 1992년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16개 지역에서 14개 업종의 1,071개 노조(조합원 40만 명)들 가운데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자주적 산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 조직건설’이라는 공동의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조 총 단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 공동의 과제로 천명되었다.

1992년의 핵심 사안은 정부가 임금인상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총액임금제⁸⁾ 분쇄였다. 노동자들은 5월 1일과 2일에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총액임금제 분쇄하고 임금투쟁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총액임금제 적용 사업장인 부천의 경원세기, 대흥기계, 동양엘레베이터 3개 노조가 6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서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이 이어졌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힘이 결속되자, 정부는 새로운 노동자 통제 전략을 도입했다. 그것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일부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는 “국가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건전한 문화로서의 정신, 사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등 문화의 창조, 매개, 향수, 교류의 제 기능이 상호 균형적 연결로 상승작용을 하여 국가번영을 주도하고 표현하는 통합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라는 5가지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전 국민의 문화적·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들은 노동자의 정치 및 계급의식의

8) 총액임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이 포함된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가 기본급 대비 최저생계비였기 때문에, 총액임금제는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통제 정책이었다. 이 임금통제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자율교섭을 침해했다.

약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김영삼 정부도 이러한 전략을 계승·발전 시키는 한편, 지배문화의 재생산을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기업문화전략으로 수용되었고, 민주노조운동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전략은 의식화 교육, 다물단 교육, 한마음 교육, 농군학교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의 경우를 보면, 다물단 교육을 이수한 결과 8천 명의 조합원들 가운데 2천 명 이상의 조합원을 다물단에 편입할 만큼, 그 영향은 거셌다.

(5) 문민정부에서의 전노협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임금인상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전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앞세워 임금인상률을 5%로 합의하게 한 후, 임금인상 억제정책을 폈다. 대법원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직권조인의 합법성을 부여했다.

이때 민주노조 진영은 사회개혁 투쟁을 이슈로 제기했다. 즉 1993년의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 30대 재벌 재산 공개, 노동법 개악 철회,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이행, 임금 억제정책 철회,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복직, 고용보험제 즉각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 민주노조 진영은 1993년에는 임금인상, 노동법개정투쟁, 고용보장, 사회개혁투쟁 등 전국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공동사안을 놓고, 통일적인 대응과 함께 강력한 결집을 위해 단일한 대오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결과 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이 모여 1993년 6월 1일에 1,145개 노조 41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연대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했다. 전노대는 노·경총의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어용 노총 해체 투쟁 및 탈퇴운동으로 결합시키면서 임금 인상투쟁을 집중시켜 나갔다.

전노대는 10월 31일에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악법 개정과 근로자 파견법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정 저지를 위한 1993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조 총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시기는 민주노조의 조직 발전을 모색, 준비하는 시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산별조직 건설을 위한 조직발전 경로와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을 ‘무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또다시 5~8.7% 임금 인상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노대는 한국노총 회비 납부 거부와 탈퇴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37개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탈퇴했고, 135개 노조가 회비 납부를 거부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모아 노동절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탈퇴와 민주노총 건설에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대회사에서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3자 개입 금지법 어기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자’고 선언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의 노동자와 학생 63명은 5월 14일에 한국노총 건물을 점거하고, 어용노총 해체와 임금합의 분쇄를 주장하며 7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6월에는 정부의 임금억제와 노동통제 정책에 맞서 줄곧 희생양이 되어 왔던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지협)’가 파업에 돌입했다. 전지협에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부산교통공단노조, 전국기관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전지협은 변형근로제 철폐, 실질임금보장, 해고자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전지협의 파업은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LNG 선상파업투쟁, 광주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대구의 대우기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각 지역별 대공장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노사협조정책을 실력으로 무력화시켜 나가려는 활동이었다.

3) 전노협을 둘러싼 논쟁과 평가

(1) 전노협 위기론

전노협은 출범 초기부터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외적으로는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있었고, 내적으로 전노협의 노선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은 ‘위기론’을 제기했고, 생산력 없는 논쟁은 보수적 헤게모니를 강화시켰다. 이 논쟁들은 학문적·이론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대결’로 맞섰다. 그리고 ‘위기론’은 당시 정세에서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표출되었던 노동운동을 고립시켰다. 즉 위기론은 전노협 건설이라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재편 과정에서 등장한 비타협적 투쟁을 ‘사회·정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기획’에 일조했다. 이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변혁적 노동운동은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 발전적 노동운동’, ‘진보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의 무차별 공격에 무기력한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노협은 ‘지역노조협의체’로, ‘업종과 대공장을 포괄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으로, ‘제조업만의 중앙’ 등으로 폄하되었다. 그렇지만 업종의 경우, 민주출판과 시설관리연맹 등이 전노협 소속이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들은 내부 조직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전노협과 조직적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사업과 연대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전노협 주도하에 16개 노조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연대회의의 소속 노조들의 조직 방침은 전노협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었다. 전노협=중소기업이라는 비판론의 허구는 ‘대기업연대회의’ 소속 노조들 가운데 전노협을 지향하지 않았던 노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해준다. 기아기공, 통일, 창원 현대정공, 서울지하철, 태평양화학, 한진중공업, 대우정밀은 전노협에 가입했고, 지노협 준비위

에 결합했던 현대중공업, 현대중전기, 울산 현대정공은 전노협 가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 외 대우조선, 아세아 자동차, 금호타이어노조는 전노협 가입을 공약으로 하여 당선되었다(김창우 2007, 37).

따라서 가입이라는 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양적 한계에 대해 비판한 견해들은 일면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전노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자신을 전국적 중앙조직이 건설되기까지의 과도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적 구심이 협의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기업별 노조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 과제는 민주노총이 결성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그리고 전노협을 제조업과 중소기업장의 협의체로만 보려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이다. 이는 1987년 이후 전노협이 창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소홀히 하며, 노동운동을 둘러싼 조건에만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공장 노조의 기득권

전노협 시기에 일부 대공장노동조합이 전노협 가입을 주저한 이유는 단위사업장 내부의 조직력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엄혹한 정세로 인해 탄압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민주노총이 산별 단일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노조일수록 대공장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으며, 대공장 노동조합의 기업별 관성을 표출했다.⁹⁾

산별로의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산별이 산별 구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투쟁전략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대공장노동조합

9) 대공장 노조들이 전반적 분위기에 따라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조직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공장 노조의 경우 2003년부터 산별전화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한 2006년에 가결되었다. 금속연맹이 산별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대공장노조들이 산별노조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의 계급인식의 취약과 기업별 관성에 있다. 민주노조의 정신인 계급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 중소, 영세, 여성, 비정규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실천을 배제한 언어일 뿐이다.

(3) 민주노조운동 조직발전 전망

조직발전 전망을 둘러싼 논쟁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전노협이 궁극적인 조직발전 전망은 산업별 단일노조에 근거한 전국중앙조직 건설이었는데, 중앙조직에 대한 형태와 경로 그리고 건설 시기가 중심적인 논쟁점들이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었다. 첫째는 ‘노자간의 대립전선은 총자본 대 총노동의 구도 속에서 산업별 전선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공장 노동자가 하나의 단일노조의 형태인 산업별(대산별)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중앙조직은 계급적 노동운동을 확고히 견지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시급히 건설하기보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의식적·조직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민주노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둘째는 ‘전국중앙조직은 노동조합의 조건과 현실을 철저히 반영한 가운데 대중적 실천을 통해서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종 간 동질성을 높여 내고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해 업종(소산별)으로 세분화해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앙조직 건설은 어떤 노조든 동의할 수 있는 최소강령 수준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을 조기에 건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은 지루한 논쟁을 지속하면서 상당 정도 차이를 좁혔으나, 결국 민주노총준비위에서 봉합 및 합의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자의 생각과 고민은 두 번째 안에 무게 중심을 두었으며, 민주노총은 1996년 이후에 건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 근거는 민주노조진영이라고 통칭되는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내부 조직들의 의식적·역사적·조직적 편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었다. 전국중앙조직은 형식적으로 건설되기보다 질적 향상을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전노대로 결집된 노동조합들이 상호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계급적 연대와 공동투쟁이 필요했는 바,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제조업, 업종, 사무 등의 편차를 좁혀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여기에는 공동투쟁의 경험이 취약한 노조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버텨낼 수 없다는 전노협을 통한 경험이 작용했다.

(4) 여성 사업에 대한 한계와 아쉬움

1970년 이래 구로동맹파업과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민주노조운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1987년 이후 외자기업의 철수와 중소기업들의 휴폐업, 수도권 공장의 지역 이전 등으로 고용불안의 위협을 받았다. 이런 외중에 사회적으로 만연된 차별의 문제는 점차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혼과 임신에 따른 퇴직강요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으나, 전노협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성문제에 대한 철학적 빈곤에 있기도 했으나, 자본과 정권의 엄혹한 탄압도 한몫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평등사회건설을 주장하며 등장한 전노협은 건설 초기부터 여성국을 설치하여 심화된 남·녀 불평등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여성 사업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여성단체와 연대 및 교류하는 형식을 띠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임시직이 확산되는 실정에서 평등권과 모성보호(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전노협의 독자적 사업 기획마저도 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

전노협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인 1995년 12월 3일에 6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산했다. 전노협은 엄혹한 정세의 중심에서 폭압적 탄압에 맞서 조직을 사수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지켜냈으며,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려 했다. 전노협은 임금인상, 노동법개정투쟁, 휴폐업저지투쟁, 국가보안법 및 반민주악법 철폐투쟁, 더 나아

가 반민자당 투쟁 등을 씬 없이 전개했다. 그 결과 6년 동안 3,000여 명의 전노협 조합원과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5,000여 명이 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전노협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어용적이고 노사협조주의적인 한국 노총의 오욕의 역사를 단죄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킨 조직적 구심이었다. 또한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결집한 계급적 단결의 구심이었다. 전노협은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과 노동해방 쟁취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자주성, 민주성, 비타협적 투쟁성, 변혁지향성’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으로 내세웠다. 이는 한국노총과 노선과 분명히 대별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전노협은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조 총 단결’ 투쟁과 조직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의 모태가 되었다(전노협백서 발간팀 1996, 제8권 430).

5. 글을 마치며

필자는 1970년대를 시작으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 이 기간에 대한 회고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실존에 대한 것이며, 그 집단은 노동자계급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는 1970~80년대를 경과하며 전노협으로 수렴되었다. 전노협은 폭압적 탄압을 극복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에 대한 희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주노총을 태동시켰다.

1995년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1천억 달러 수출’이라는 정부의 목표 제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국제경쟁력강화’와 ‘세계화’ 이데올로기 속에 한국노총과 경총은 1995년 12월 20일 노사한마당을 열었다. 이

들은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일소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짐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면 정부와 자본에 맞서 싸우며, 자주적·민주적 노조운동을 전개해온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지 1년 만인 1995년에 산별노조의 건인가가 될 민주노총을 건설했다.

민주노총은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망라했다. 민주노총에는 15개 산업별(업종) 조직, 861개의 노조, 418,154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줄기차게 벌여 온 전노협 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총망라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결성 이후 15년을 경과하는 동안 조합원 수가 8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열망이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고 조직체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아울러 조직발전 전망이었던 산별노조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리되었고, 분당의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제출되지 못했다. 계급정당 지향의 정치세력화는 의회의 구석진 곳에서 맴돌았고, 노동자대중은 혼란스러워하며, 진보정치의 신선한 충격은 퇴색되고 있다. 산별노조가 형식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책과 더불어 밀려오는 허전함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70년대를 돌아켜보면, 그 당시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노동자 통제장치에 대한 기억이 마음을 저리게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금융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상륙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균열을 시도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포섭과 배제의 전략에 의해 비정규직이 정상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자본의 중·장기적 전략으로 기획된 이데올로기와 공안 통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오늘날 이것들은 노동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으나, 민주노조운동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응을 위한 동력이 취약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적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시켜 내고, 민주노총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민주노총을 변혁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유범상 2005, 32). 민주노총은 전체주의 노선이든, 비즈니스 노선이든, 코프라티즘 노선이든, 변혁노선이든 간에 자신의 노선을 천명해야 한다. 강령과 규약, 전략과 전술 나아가 당면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계획과 노선도 없는 사업은 정체성에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민주노총 건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라는 난국에 봉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노조운동은 세월을 거둬하며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발전한다는 합법칙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하여 긴장과 치열함이 공존했던 지난 시기의 운동에서 전망을 찾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변혁에 대한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노동자대중들이 밝은 전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김현욱*

참고문헌

- ILO. 1986. 『ILO통계연감』.
- 김금수. 1986. 『한국 노동통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 김진균. 1996. 『산업노동 연구』. 산업노동학회.
- 김창우. 2007.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후마니타스.
- 김현욱. 2007. 『질라라비』 7월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서울노동운동연합. 1985. 『선봉에 서서』. 돌베개.
- 양규현 외. 2009. 『안녕, 사회주의』.
- _____. 2010.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메이데이.
- 유경순. 2007. 『내일을 여는 역사』 27.
- 유범상. 2005.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한국노동연구원.
- 이광일. 2008. 『좌파는 왜 좌파가 됐나』. 메이데이.
- 이영희. 1989. 『월간노동』 5. 백산서당.
- 전국노동단체협의회. 1988. 『노동운동』.
- 전노협백서발간팀. 1996. 『전노협 백서』. 전노협.
- 전태일기념사업회. 1991.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 통계청. 199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의 발자취』.

투고: 2011.3.31